

전북 발전, 전 분야 걸친 거버넌스 구축부터 출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보자는 출범한 김관영 민선8기 전북도정.

전북도정이 도정 제 과제로 삼은 전북경제 살리기 민·관·산·학 등 전 분야에 걸친 거버넌스 구축에서부터 출발한다. 기업유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등 두루두루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협치 행정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지난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개막한 이래 전라북도 지방정부 도백으로는 유일하게 행정과 사법, 입법 등 3개 기관을 두루 거치며 그 누구보다 협치를 통한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왔던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부터 관행적인 행정행태에서 탈피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후 야당 소속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특강 강사로 초청하고 직접 상대당의 사무실을 찾아가 "진영과 이념을 따지지 않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하자"며 협치의 정신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김 지사는 또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3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요청한 뒤 취임 후 실제 임명으로 이어져 전북도와 집권 여당·정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게 했다.

협치와 소통이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는데 전북도정의 밑바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김관영 도정은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자로 여야 전북 국회의원과들의 소통도 매일 개최하는 등 정례화해 나가며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 전북도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지역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려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전북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 지방정부 수장으로 당선된 김 지사는 전북을 이끌어갈 동량들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계까지 협치행정의 동반자로 끌어들이었다.

김 지사와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8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미래 교육의 필요성 속에 소

국립과 소통장구 만들어
여야 전북 국회의원과
매달 현안해결에 머리 맞대

교육협력추진단 설치 등
교육계까지 협치 동반자로

기업 유치 거버넌스 구축 진행

서울교육청·전북교육청과
농촌유학 활성화 협약 체결도

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전북 교육 살리기에 손을 맞잡았다.

가칭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해 시군별로 분산되고 중복된 교육 정책을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으며, 김 지사는 이후 서거석 도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전북도정의 최대 사명인 전북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협업을 재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훌륭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생존전략이다"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하고 가장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분야임을 피력했다.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와 도교육청, 대학과 협력행정체제 구축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 7월 28일 전북지역 10개 대학총장협의회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 다음날에는 7개 전문대학협의회와도 특



- ①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
- ② 운주농촌유학센터 방문
- ③ 국민의힘 전북도당 방문
- ④ 전북 농촌유학 활성화 협약 체결

이처럼 전북도정이 교육행정과의 협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전북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유치와도 맞물려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진학뿐만 아니라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한 협치행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기업, 해당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이행할 때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담반(태스크포스, T/F)을 가동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치행정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인간행이다"며 "그런 맥락에서 기업유치와 인재양성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북도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해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북경제는 물론 인재양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을 비롯해 모든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의 앞으로의 행보에 전북도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수 기자

